

## 북한의 대외정세 인식과 국방력 강화에 관한 연구\*

박형준(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교양대학 조교수)\*\*

박성용(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 논문요약

최근 북한의 공세적 미사일 도발이 단순 개발 차원이 아닌, 미사일 발사 역량의 다양성을 과시하기 위한 전술핵 부대의 군사훈련으로 전개됨에 따라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지도부가 인식하는 현 정세는 비핵화 선제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부터 지난 3년여 동안 얻은 것이 없으며, 이용만 당했다고 본다. 특히 적대시 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자신들에 대한 체제 위협이 한층 고조되는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의 위기(crisis)라는 상황적인 변수가 핵무력 강화로 대변되는 국방력 강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미국과의 관계 설정과 연계된 외부적인 환경(external environment)으로 인한 국방력 강화의 특징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대외정세 인식에 대한 고찰을 통해 북한 군사력 강화의 특징을 살펴보는 데 있다. 즉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어떻게 정세를 인식하고 있으며, 미국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리고 그로 인해 핵무력으로 대표되는 북한 국방력 강화의 특징과 변화를 고찰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교착 국면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안보적 대응 방안 및 경색 국면 완화를 위한 시사점 제공에 의의가 있다.

주제어: 북한, 대외정세, 대미 인식, 국방력, 핵무력

\* 본 논문은 「한국정치정보학회」 대전대 안보군사연구원 2022 공동학술회의(2022.10.12.) 발표문, 「안보이슈브리핑」 Vol. 3 No. 4 기고문 등을 대폭 수정·보완한 글임을 밝힙니다.

\*\* 제1저자

\*\*\* 교신저자



## I. 서론

북한이 올해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실시한 7차례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단순 미사일 개발이 아닌, 미사일 발사 역량의 다양성을 갖춘 전술핵 부대의 군사훈련이었다. 타격 목표와 대상을 한국 내 주요 시설로 상정했으며, 거리상 일본과 미군 기지까지도 염두에 둔 미사일 발사시험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이와 관련한 북한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임으로써 최근 법제화한 자신들의 ‘핵무력정책’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동시에 전술핵무기의 선제적 사용 또한 시사한 것이다. 이와 같은 핵무력 강화를 둘러싼 북한의 국방력 강화 시도는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한편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제14기 제7차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우리의 핵 그 자체를 제거해버리자는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핵을 내려놓게 하고 자위권행사력까지 포기 또는 열세하게 만들어 우리 정권을 어느 때든 붕괴시켜버리자는 것”이라고 밝히며, 대미 불신의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그러면서, “나라의 생존권과 국가와 인민의 미래의 안전이 달린 자위권을 포기할 우리가 아니며 그 어떤 극난한 환경에 처한다 해도 미국이 조성해놓은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 형세하에서, 더욱이 핵적수국인 미국을 전망적으로 견제해야 할 우리로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며 비핵화 불가 입장을 천명했다.<sup>1)</sup> 게다가 다양한 전술핵무기 개발을 통해 핵무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다시금 밝혔다. 이로써 남북 및 북미 관계가 2018년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대화 중단 기간 동안 북한은 핵무력을 더욱 강화해나갔다는 점이고, 동시에 급변하는 대외정세 속에서 핵무력 정책의 법제화를 통해 핵의 불(不)포기, 선제적 핵사용 등 핵무기 사용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조선중앙통신』 2022년 9월 9일.

을 공식화하며 군사전략을 더욱 공세적으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북한이 한때나마 밝혀왔던 핵무기 사용의 자위적·방어적 목적에서 벗어나, 선제 핵공격까지 시사했다는 점에서 한반도 안보 환경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sup>2)</sup> ‘강 대 강’ 대치 국면의 본격화가 예상된다.

이처럼 북한이 공세적 무력도발로 전환한 배경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을 미국이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적대시 정책이 강화된 점, 그로 인한 대미 불신의 증폭 등에 있다. 다시 말하면, 북한지도부는 자신들의 비핵화 선제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여 동안 얻은 것이 없으며 적대시 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 동맹이 강화되고 한·미연합훈련의 강도가 원래 수준으로 회귀하면서 북한이 판단하는 체제 위협인식이 가중되었다. 즉 대미 관계 개선의 실패, 한·미의 군사적 공조 확대, 대북 제재의 확대 등 자신들의 체제에 대한 위협이 한층 고조되는 상황에서 핵 교리의 제정을 통해 혹시 모를 미국의 체제 붕괴 시도에 대비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한 국가의 정책 및 전략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현 정세를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달려 있다. 즉 자신들이 직면한 현재 상황에 따라 정책상의 변화가 나타난다. 북한의 위기(crisis)라는 상황적인 변수가 핵무력 강화로 대변되는 국방력 강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미국과의 관계 설정과 연계된 외부적인 환경(external environment)이 어떻게 대외정책을 결정짓는가 혹은 가능한 선택을 최소한 어떤 방식으로 조건 짓는가를 고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sup>3)</sup>

한편 선행연구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 경향이 나타났다. 우선 북한의 국방력 강화가 대내 정치체제 및 경제 변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이

2) 북한은 제8차 당대회까지만 하더라도 핵무력의 사용을 ‘방어적·자위적’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최강의 전쟁억제력을 비축하고 끊임없이 강화하고있는것은 우리스스로 지키기 위해서이며(중략)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우리를 겨냥하여 핵을 사용하려 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람용하지 않을것임을 다시금 확인”한다고 밝혔다.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을 새 승리에로 인도하는 위대한 투쟁강령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보고에 대하여. 3.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대외관계발전을 위하여.” 『로동신문』 2021년 1월 9일.

3) 박재영, 『국제정치 패러다임』, 서울: 법문사, 2004, p. 310.

있다.<sup>4)</sup> 대부분 국방력 강화의 계기를 살펴보고 어떻게 북한 사회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고찰하는 연구로, 주로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한편 북한의 군사목표와 군사전략을 소개하며, 역사적 관점에서 군사전략을 시기별로 고찰한 연구물들도 눈에 띈다.<sup>5)</sup> 이들 연구는 북한의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군사전략의 변화를 고찰하며, 각시기 별 특징을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 북한의 특정 시기 또는 주요 계기와 군사전략 변화와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sup>6)</sup> 기존 연구들은 북한의 국방력 강화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대내 정치·경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거나, 군사전략 변화를 연구했다. 반면 본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북한의 주요 정치행사를 통해 확인한 대외정세 인식과 국방력 강화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북한의 국방력 강화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로는 ‘억제(Deterrence)’ 개념을 살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국방력 강화 행태는 잠재적 위협 인자로부터 자국의 영토나 핵심 이익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sup>7)</sup> 여기서 억제(Deterrence)란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행사하지 않고서도 보유하고 있는 군사적 역량을 활용하여 실제로 공격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위협’에 일차적인 목표가 있다. 즉 상대방에게 두려움, 공포, 실패 위험성 등을 강하게 인식시켜 군사행동을 막고 이득보다 손해의 가

- 
- 4) 이상봉, “1960년대 북한의 국방력 강화 노선과 정치체제의 변화.” 『國際政治論叢』 제44집 제2호, 2004. ; 하상섭, “국제사회 극체제 변화 속 북한 국방력 강화가 북한 안보-경제 메커니즘에 미치는 영향.” 『한국시스템다이나믹스연구』 제23권 제2호, 2022. ; 박현욱, “[군사 : 비대칭 군사전략 강화로 정치협상 추구] 변하지 않는 북한의 군사우선 정책과 비대칭 전력을 이용한 정치협상 추구.” 『북한』 통권 432호, 2007.
- 5) 이상택, “북한 군사전략의 역사적 고찰.” 『軍史』 제112호, 2019.; 이홍석, “역사적 맥락을 적용한 북한 군사전략과 군사력 건설에 관한 연구.” 『軍史研究』 제149집, 2020.; 박용환, “북한의 군사전략 노선과 목표.” 『북한』 통권 575호, 2019.; 박용환, “북한 군사전략에 관한 연구.” 『북한학연구』 제6권 제1호, 2010.
- 6) 박현욱, “북한의 선군정치와 군사전략.” 『북한』 통권 325호, 2001.; 고재홍, “북한의 핵군사 전략.” 『북한』 통권 420호, 2006.; 김동엽, “경제·핵무력 병진노선과 북한의 군사 분야 변화.” 『현대북한연구』 18권 2호, 2015.; 김동엽,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군사 분야 변화와 전망.” 『경제와사회』 통권 제122호, 2019.; 김태환, “북한군 군사전략 변화에 대한 연구: ‘전략불균형’에 대한 ‘위협관리’를 중심으로.” 『전략연구』 통권 제66호, 2015.
- 7) 김현기, “억제전략의 이론 연구.” 『전략논단』 통권 제5호, 2006, p. 31.

능성을 높여 상대방의 행동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강압적전략”(coercive strategy)<sup>8)</sup>, 또는 강요(compellence)를 의미한다.<sup>9)</sup> 특히 핵무기의 등장으로 인한 상호 파괴 공포감의 증대는 국제사회에서 억제전략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계기가 되었다.<sup>10)</sup>

이와 같은 개념의 억제는 거부적 억제(deterrence by denial)와 응징적 억제(deterrence by punishment)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거부적 억제는 사전에 상대방의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sup>11)</sup> 즉 상대측에 선(先) 공격에 대한 부담과 피해 범주를 확신시킴으로써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반면 응징적 억제는 상대방의 공격 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마련되어 있어, 가용 수단의 모든 활용을 통해 훨씬 더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2차 보복의 가능성을 인식시켜 공격을 막는 것을 의미한다.<sup>12)</sup> 이때 억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능력(capability), 의지 전달(communication), 신뢰성(credibility) 등 필수적인 3가지 조건이 수반되어야 한다. 즉 능력은 상대방의 공격을 거부 또는 보복할 수 있는 능력, 즉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동시에 실제로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그리고 공격 능력과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신뢰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처럼 억제는 막강한 군사력 또는 경제력 등을 기반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위기감을 초래할 수 있는 수준에 오를 때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sup>13)</sup> 억제를 통해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능력과

8) Freedman, Lawrence, *Deterrence*, Cambridge: Polity Press, 2004, p. 26.

9) Lebow, Richard N., *Coercion, Cooperation and Ethics in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Routledge, 2007, pp. 223~291; Roehrig, Terence, *From Deterrence to Engagement: The U.S. Defense Commitment to South Korea*, Lanham: Lexington Books, 2006, pp. 11~28; 박휘락, “핵억제이론에 입각한 한국의 대북억제태세 평가와 핵억제전략 모색.” 『국제정치논총』 제53집 3호, 2013, p. 151.

10) 김현기, “억제전략의 이론 연구.”, p. 31.

11) 신동훈, “핵억제 이론을 통해 살펴 본 북한의 핵전략.” 『韓國軍事學論集』 제74집 제1권, 2018, p. 150.

12) 문성준, “억제이론을 중심으로 저위력 핵무기 개발 및 함의에 관한 연구.” 『선진국방연구』 제4권 제3호, 2021, p. 115.

13) 온창일, 『전략론』, 서울: 지문당, 2004, p. 176; 이홍석, “역사적 맥락을 적용한 군사전략과 군사력 건

의도, 수단 등이 상대방에게 충분한 위협으로 인식되고 영향을 미칠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역내 핵보유국과 비핵보유국 간 갈등상태에서 억제구조를 설명하는 데 적실성을 지닌 ‘삼각 억제(triangular deterrence)’ 이론이 있다.<sup>14)</sup> 삼각 억제는 동맹국<핵보유국(A), 비핵보유국(B)> 간 확장억제를 제공하며, 비핵보유국(B)이 핵보유국(A)으로부터 확장억제를 제공받는 상황에서, 동맹이 아닌 또 다른 핵보유국(C)이 비핵보유국(B)에 대한 핵 위협을 통해 자신들(핵보유국C)은 핵보유국(A)의 공격을 막는 억제를 달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같은 억제 및 삼각 이론은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의 목적이 북한의 대외정세 인식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핵무력으로 대표되는 국방력 강화의 특징을 살펴보는 데 있기 때문이다. 즉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어떻게 정세를 인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핵무력으로 대표되는 북한의 국방력 강화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등의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로동신문 및 조선중앙통신, 담화 등의 해석을 통한 문헌연구 방법을 활용했다. 본 연구는 교착 국면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안보적 대응방안 및 경색 국면 완화를 위한 시사점 제공에 의의가 있다.

실에 관한 연구.”, p. 354.

14) Harkavy, Robert E., “Triangular or indirect deterrence/compellence: Something new in deterrence theory?” *Comparative Strategy*, Vol. 17, No. 1, 1988, pp. 63~81; 문성준, “억제이론을 중심으로 지위력 핵무기 개발 및 함의에 관한 연구.”, p. 116.

## II. 북한의 대외정세 인식과 노선 변화

### 1. 주요 정치행사를 통해 본 북한의 정세 인식

#### (1) 당중앙위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정면돌파전’

북한은 2019년 12월 28일 개최된 당중앙위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정서를 통해 ‘정면돌파전’을 선언했다. 북한이 이같이 강경 입장으로 돌아서게 된 배경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과 10월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에서 비롯됐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협상 카드로 내세웠지만, 미국이 영변 핵시설 폐기 외에도 추가적인 핵 신고 리스트 제출을 요구하면서 회담이 결렬됐다. 그리고 실무협상에서 미국은 경제적 보상과 밝은 미래의 보장이라는 청사진 성격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시했지만, 자신들의 실질적인 안전보장을 요구하는 북한의 입장과 충돌하며 협상이 중단됐다. 다시 말하면, 북한은 ‘선(先)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는 미국이 하노이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빈손으로 협상에 나섰다고 판단하고, 협상 결렬 직후 15분 만에 대미 비난 성명을 발표하며 회담장에서 철수했다.<sup>15)</sup>

당시 북한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고, 자신들의 요구 사항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핵 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즉 자신들이 선제적으로 취했던 합의 사항 이행에 대한 미국의 신뢰성 있는 상응 조치(안전보장) 없이, 선 비핵화만을 주장하는 미국의 일방적 협상 논리에 크게 실망하며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sup>16)</sup>

15) 북한 김명길 대표는 회담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국이 “기존 입장을 고집”하는 “낡은 각본”을 들고 “아무런 타산이나 담보도 없이” “막연한 주장”을 펼쳤다고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 2019년 10월 5일.

16) 홍민, “북미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원인과 북한의 전략.”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9-22, 2019, p. 3.

이 같은 미국의 협상 선택법을 확인한 북한은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강경 대응 입장으로 노선을 변경하며 “강력한 정치외교적, 군사적공세로 정면돌파전의 승리를 담보할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김정은의 정세 판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sup>17)</sup>

“미국이 지난 70여년간 우리 국가를 적으로, 《악의 축》, 《핵선제공격대상》으로 규정하고 가장 야만적이며 비인간적인 제재와 지속적인 핵위협을 가해왔으며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말미암아 오늘 조선반도정세는 더욱 위험하고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

“우리가 조미사이의 신뢰구축을 위하여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중지하고 핵시험장을 폐기하는 선제적인 중대조치들을 취한 지난 2년사이에만도 미국은 이에 응당한 조치로 화답하기는커녕 대통령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크고작은 합동군사연습들을 수십차례나 벌여놓고 첨단전쟁장비들을 남조선에 반입하여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하였으며 십여차례의 단독제재조치들을 취하는것으로써 우리 제도를 압살하려는 야망에는 변함이 없다”

이처럼 북한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핵시험 및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 핵시험장 폐기, 유해 송환 등 미국과의 신뢰 구축을 위해 선제적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에 대한 상응 조치 없이 선 비핵화만을 주장하는 태도를 비난했다. 또 한미연합훈련, 남한 내 첨단무기 반입, 추가적인 대북 제재 등 적대시 정책이 중단되지 않는 당시 상황에서 자신들의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목표에 변함이 없다고 판단했다.

17) “주체혁명위업승리의 활로를 밝힌 불멸의 대강-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가자.” 『조선중앙통신』 2020년 1월 1일.

## (2) 제8차 당대회 : ‘강 대 강, 선 대 선’

북한은 2021년 1월 개최된 제8차 당대회 당중앙위 제7기 사업총화보고에서 미국을 향해 ‘강 대 강, 선 대 선’ 원칙에 따라 상대할 것이라고 밝혔다.<sup>18)</sup> 동시에 북미 관계 개선의 전제 조건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임을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2020년의 ‘정면돌파전’ 기조를 더욱 구체화시켜 나가는 한편 바이든 신행정부가 들어서는 미국의 정책변화를 촉구했다. 즉 자신들에게 적대적으로 나올 경우, 더 큰 무력을 동원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으로, 미국의 정책 기조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을 선언하며, 미국에 공을 돌렸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북한이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해 선제적 노력을 취했지만, 오히려 되돌아온 것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강화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방력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다양한 전술핵무기의 개발을 통해 미국의 위협을 억제 및 관리하고자 했다.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려는 일념으로부터 지역의 긴장격화를 막기 위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선의의 노력과 최대의 인내심을 발휘하였지만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약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극심해졌다.”

“현실은 국가방위력을 순간도 정체함이 없이 강화하여야 미국의 군사적위협을 억제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강력한 국가방위력은 결코 외교를 배제하는것이 아니라 옳은 방향으로 추동하며 (중략) 조성된 정세속의 현실은 군력강화에서 만족이 있을수 없다는것을 다시금 확증해주고 있다.”

18)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을 새 승리에로 인도하는 위대한 투쟁강령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보고에 대하여.” 『로동신문』 2021년 1월 9일.

“국가방위력강화를 위한 중대과업들은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분별없는 군비증강으로 국제적인 힘의 균형이 파괴되고있는 실정에서 (중략) 나라의 군사적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철의 신념과 의지의 표명으로 된다.”

이처럼 제8차 당대회 개최 당시 북한의 대외정세 판단은 2020년 내내 대북 제재가 가일층 강화되고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자,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합의 불이행과 미국의 시간 끌기에 대한 북한의 불만이 고조된 상황이었다. 그 속에서 북한은 COVID-19 확산, 경제난, 홍수 피해 등 이른바 ‘3중고’를 겪으며 관망적 자세를 유지하며 국내 문제 해결에 집중했고, 미국 역시 COVID-19의 확산과 대선 일정이 겹치며 북한 비핵화 문제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다. 이에 따라 바이든 신행정부의 정책변화를 촉구하는 한편 관망적·유보적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그리고 군사전략의 유연한 대응과 협상 공간의 확보가 가능한 ‘강 대 강, 선 대 선’ 노선을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3)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기존 노선의 유지

남북 및 북미 간 경색 국면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개최된 2021년 말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당시, 북한은 “다사다변한 국제정치정세와 주변환경에 대처하여 북남관계와 대외사업부문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문제들과 일련의 전술적방향들을 제시하였다.”라고만 짧게 언급했을 뿐, 새로운 노선을 발표하지 않았다. 대신 ‘사회주의 농촌문제’ 발전을 위한 내치 문제에 집중했다. 그러면서도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의 군사적 환경과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대만해협 위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위기 등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군사력 강화

를 과업으로 지시했다.<sup>19)</sup>

“군수공업부문에서는 당 제8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이룩된 성과들을 계속 확대하면서 현대전에 상응한 위력한 전투기술기재개발 생산을 힘있게 다그치며 국가방위력의 질적변화를 강력히 추동하고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목표를 계획적으로 달성해나가야 한다.”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민방위무력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우며 훈련혁명을 일으켜 로농적위군 지휘성원들의 군사적자질과 지휘능력, 민간무력의 실전능력을 높여야 한다.”

즉 비핵화 협상이 미국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며, 북한은 먼저 새로운 형태의 노선을 발표하지 않았다. 즉 미국의 특별한 대북 정책상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 그리고 미국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사회주의 농촌발전 문제와 방역사업 등 내치(內治) 문제에 집중하며, 국방력 강화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

19)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발전과 우리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22년 1월 1일.

## (4)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 선제적 핵무력 사용 시사

김정은은 지난 9월 8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자력갱생 노선을 고집하며 북한의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sup>20)</sup> 그러면서 “여전히 제국주의가 제재와 정치·군사적 힘을 활용해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으며,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위적 국방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앞서 4월 25일 열병식 연설에서도 “힘과 힘이 치열하게 격돌하는 세계” 혹은 “급속하게 변화되는 전쟁양상” 등과 같은 표현을 통해 신냉전적 국제질서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표명한 바 있다.<sup>21)</sup> 즉 ‘제국주의 대 사회주의 간의 대립과 투쟁’으로 인한 정세의 긴장, 미국과 한국의 적대시 정책 강화에 대응하여 대미 억제 및 전쟁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sup>22)</sup>

“지금 미국은 우리의 핵과 자위력강화가 세계평화와 지역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으로 된다는 일토당토않은 궤변 (중략) 우리를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추종세력들까지 총발동한 사상최악의 제재봉쇄와 정치군사적공세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습니다.”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우리의 핵 그 자체를 제거해버리자는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핵을 내려놓게 하고 자위권행사력까지 포기 또는 렬세하게 만들어 우리 정권을 어느때든 붕괴시켜버리자는것입니다.”

20) 첫째, 핵무력의 협상 대상 제외 선언, 둘째, 자력갱생을 보장하기 위해 경제 전반의 활성화와 공급능력의 회복 및 기술개발의 필요성 강조, 셋째, 식량문제와 인민소비품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생산 및 경공업 발전 주력, 넷째, 동-서해를 연결하는 대운하 건설사업 제시, 다섯째, 백신 접종실시와 마스크 착용 권고 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시정연설.” 『로동신문』 2022년 9월 9일.

21) 고재홍, “북한의 대외 강경행보 배경과 파급영향.” 『이슈브리프』 제404호, 2022, p. 1.

22) 홍민·홍계환,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시정연설 분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2-26, 2022, p. 2.

“미국은 사상최대의 제재봉쇄로써 우리에게 간고한 환경을 조성하고 진맥이 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국가의 안정적발전환경에 대한 불확신성과 위협을 느끼게 함으로써 우리가 핵을 선택한 대가에 대하여 생각해보게 하고 당과 정부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을 유발, 야기시켜 우리스스로 핵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어보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을 자신들의 미사일 시험과 무기 개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자 했다. 즉 주변 정세의 악화와 미국의 핵무기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을 군사력 강화의 필요성과 결부시키며 다양한 전술핵무기의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국제관계에서 자신들이 처한 위기가 심각할수록 적(敵)이 더욱 적대적으로 된다고 인식하며 위기 시에 자신의 정책대안의 수는 적고 적의 선택범위는 넓다고 인식한다.<sup>23)</sup> 북한도 이와 마찬가지로 계속되는 추가 제재와 한미연합훈련의 강화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전술핵무기의 개발을 통해 자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의 수를 늘려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또한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 2. 비핵화 협상 결렬 이후 북한의 대미 인식

북한은 지난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을 비롯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협상 태도에 속았으며, 정치적 쇼에 이용만 당했다고 인식했다. 자신들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결정한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기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며, 정치적 이득만을 취하기 위해 ‘시간 끌기’를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이행했던 비핵화 초기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약속했던 종전선언을

23) 박재영, 「국제정치 패러다임」, p. 310.

포함한 적대시 정책의 변화 없이 여전히 자신들에게 적대적 행동을 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자신들의 실익이 보장되지 않는 협상에는 절대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미국과는 더 이상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과 미국은 과거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합의 불이행’의 악순환을 반복했고, 이에 따라 불신이 북미 관계와 비핵화 협상의 상수가 되었다. 특히 타도 대상, 적(敵), 제국주의, 철천지원수 등으로 대변되는 북한의 대미 인식은 미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더욱 확장 시켜 나갔다. 게다가 장기간 적대적 관계를 지속해 오던 양국 관계에서 무엇보다 신뢰가 가장 밑바탕을 이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래전부터 내재 되어 있는 적대 인식에 함몰되어 특히나 체제 생존과 직결된 협상에서 협력의 범주를 축소 시켰다. 즉 과거 학습효과를 통해 이미 미국의 약속 불이행을 경험했던 북한은 미국을 믿지 못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협상 과정 또한 경직되고 위축되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sup>24)</sup>

24) Lindblom, Charles, *The Intelligence of Democracy*, New York: Free Press, 1965, p. 227; Keohane, Robert O,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pp. 51~52; 서보혁, 『탈냉전기 북미관계사』, 서울: 선인, 2004, p. 106.

〈표 1〉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대미 인식

사례	주요 발언
김정은 위원장 전원회의 결과 보고	“미국의 본심은 대화와 협상의 간판을 걸어놓고 흡진압진하면서 리속을 차리는 동시에 제재를 계속 유지하여 우리의 힘을 점차 소모 약화시키자는 것이다.” “다시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미국 집권자에게 치적선전감이라는 보따리를 던져주지 않을 것이다.”
김계관 외무성 고문 담화	“명백한것은 이제 다시 우리가 미국에 속히워 지난 시기처럼 시간을 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을것이라는 것”이라고 언급함과 동시에 “평화적인민이 겪는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려고 일부 유엔제재와 나라의 중핵적인 핵시설을 통채로 바꾸자고 제안했던 베트남에서와 같은 협상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리선권 외무상 담화	“우리는 다시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미국집권자에게 치적선전감이라는 보따리를 던져주지 않을 것이다. 실천이 없는 약속보다 더 위선적인것은 없다.

출처: 박형준, “북한의 대미 담화 연구: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이후를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제21권 4호, 2020, p. 236.

북한은 이와 같은 대미 인식하에 핵무력 강화를 최우선으로 한 국방력 강화를 위해 2012년 4월 ‘핵보유국 선언’ 헌법 명시를 시작으로 2013년 4월 최고 인민회의 제12기 7차 회의에서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의 법령 채택을 통해 핵무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갔다.<sup>25)</sup> 그리고 2013년 3월 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7기 3차 전원회의를 통해 ‘경제건설·핵무력 건설 병진노선’(핵경제병진노선)을 채택하기도 했으며, 제8차 당대회에서는 노동당 규약을 개정했다.

25)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1일.

### Ⅲ. 북한 국가방위력 강화의 특징과 변화

북한의 국방력 강화 움직임은 미국의 체제 붕괴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억제 효과를 달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왔으며,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시켜 왔다.<sup>26)</sup> 따라서 김정은 집권 이후 핵과 미사일 중심의 핵능력을 고도화시키는 한편 제도적 보안을 통해 미국의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핵무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sup>27)</sup> 그리고 김정은 시기 핵무력 강화의 방점을 찍은 정책 결정이 지난 9월 8일, 공표한 ‘핵무력정책’ 법령이다.

#### 1. 국가방위력 강화의 명분과 정당성 강조

##### (1)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인한 체제 보장 수단의 필요

북한은 핵무기 개발, 미사일 시험발사, 전술핵무기 개발 등 국방력 강화의 정당성과 명분을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서 찾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방공업 강화 발전 계획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 획득, 더 나아가 핵 강대국으로의 길을 단계적으로 밟아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는 제8차 당대회 사업 총화보고에서 밝힌 ‘국방공업 강화 발전계획’을 통해 실천하고 있다.

즉 악화하는 대외정세 속에서 미국의 핵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한편 ‘강대 강, 선 대 선’ 노선을 관철시킬 수 있는 수단이 핵 및 미사일 전력의 고도화임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제8차 당대회에서 ‘국방

26) 김정은은 “우리의 핵무기는 건국초기부터 세계최초의 핵사용국이며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의 핵공갈을 받아온 우리 공화국이 자기의 존엄과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고 핵전쟁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수십년간의 간고하고 피어린 투쟁으로 마련한 억제수단, 절대방기”라고 언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시정연설.” 『로동신문』 2022년 9월 9일.

27) 이흥석, “역사적 맥락을 적용한 군사전략과 군사력 건설에 관한 연구.”, p. 364.

부문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핵무기의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초대형 핵탄두 △1만 5000km 사정권 타격 명중률 제고,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극초음속미사일) 개발·도입, △수중 및 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핵잠수함 및 수중 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등을 핵심으로 하는 5대 과업을 설정했다.

〈표 2〉 제8차 당대회 국방공업 강화 발전 방안

분야	주요 내용
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기술의 고도화</li> <li>-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전술무기화 등을 통한 전술핵무기 개발</li> <li>- 초대형 핵탄두 생산의 지속</li> </ul>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정거리 15,000km 내의 명중률 제고를 통한 핵선제 및 보복타격 능력의 고도화</li> <li>- 무기의 지능화, 정밀화, 무인화, 고성능화, 경량화 실현</li> </ul>
전략적 과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지속적 개발</li> <li>- 핵잠수함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보유</li> <li>- 군사정찰위성, 무인정찰기 등 정찰수단 개발</li> </ul>
기본 과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방과학기술의 고도화</li> <li>- 첨단무기와 전투기술기재 연구 개발</li> <li>- 전 인민 항전준비 완성</li> </ul>

출처: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보고에 대하여.” 『로동신문』 2021년 1월 9일. 토대로 저자 작성.

북한이 핵무기를 포함한 국방력 강화의 최대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는 적대시 정책 폐기 주장은 여러 수단을 통해 전파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 연설, 김여정 담화, 외무성 주요 인사 및 대변인 성명 또는 담화, UN 대사 발언 등을 통해 미국과 국제사회에서 행해지는 북한 관련 사건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2021년 3월 미국의 대북 접촉 시도와 관련하여 북한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명의로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의 적대시 정책 사례들을 열거하며, 이의 폐기를 주장하는 한편 ‘강 대 강, 선 대 선’ 원칙에 입각한 대미 정책을 추진할 것을 재확인시켰다.<sup>28)</sup>

“《공산국가》, 《비시장경제국》으로 규정하고 《인권문제》, 《대량살륙무기전파》, 《테로지원》, 《종교탄압》, 《자금세척》 등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완전차단. 이것이 적대시정책이 아니라면 《우호정책》이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조선전쟁을 끝장내기 바란다면,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바란다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우리를 겨냥한 합동군사연습과 각종 전략무기투입을 영구중지하는 것으로부터 대조선 적대시정책 포기의 첫 걸음을 떼야 할 것입니다.”

한편 김정은은 올해 7월 개최된 전승절 69주년 기념행사<sup>29)</sup>와 9월 개최된 제14기 제7차 전원회의 시정연설<sup>30)</sup>에서 윤석열 정부 등장 이후 전개되고 있는 한·미 동맹 강화 움직임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비난했다.

“미국이 우리 국가의 영상을 계속 훼손시키고 우리의 안전과 근본 이익을 계속해 엄중히 침해하려 든다면 반드시 더 큰 불안과 위기를 감수해야만 할 것”이다.

“미제는 동맹 강화라는 미명 하에 남조선 당국을 추동질해 자살적인 반공화국 대결로 떠밀고 있다”며 “미국은 오늘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위협한 적대행위를 그치지 않고 있다”

2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설희 외무성제1부상 담화.” 『조선중앙통신』 2021년 3월 16일.

29) “조국해방전쟁참전자들은 우리 공화국의 가장 영웅적인 세대이다.” 『조선중앙통신』 2022년 7월 28일.

3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시정연설.” 『로동신문』 2022년 9월 9일.

그리고 올해 10월 개최된 제77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김성 유엔 북한대사 또한 북한 정권에 대한 비난과 국제사회가 제기하는 각종 문제들에 반론을 제기하며, 이 모든 문제들을 적대시 정책으로 언급했다. 동시에 한반도 안보 불안의 미국 탓으로 돌리며, 한반도 평화와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핵우산 제공, 한미군사훈련과 전략무기 전개, 군비증강 등을 완전히 중단할 것을 전제 조건으로 밝혔다.

“오늘날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횡포와 독단이 세계 각지에서 어지는 군비 확장 경쟁의 근본 원인이다.”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미국의 적대시에 항거하여 핵무력 정책 법령까지 채택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놓은 지난 30년 간의 간악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바로 오늘의 현실을 가져왔다.”

이어 김성 대사는 “우리의 자위적 역량의 주 임무는 적군이 침략과 군사적 공격 시도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전쟁을 억제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완전한 핵무기 폐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핵 폐기에 앞장서고 핵우산 공급을 자제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sup>31)</sup>

이처럼 북한은 현재 한반도의 안보 환경이 미국과 미국에 협조하는 동맹국들의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인해 긴장이 더욱 격화되고 있으며, 대결 구도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즉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시 정책 폐기는 체제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으로 인식하며, 우선적 해결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앞선 북한의 주요 인사들이 언급한 적대시 정책은 북한 정권 비난, 미국 행정부의 체제 위협 발언, 한·미연합훈련, 미국 핵전략자산의 핵우산 제공,

31) “北유엔대사 “美, 핵우산 제공 자제하라”...연합훈련 중단 요구.” 『연합뉴스』 2022년 10월 12일, <https://www.yna.co.kr/view/AKR20221012041900072?input=1195m>(검색일:2022.10.28.).

UN 인권, 제재, 테러지원국 지정 등 자신들의 체제와 안전에 대한 위협, 최고 존엄 모독, 정권의 부정행위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모든 적대시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에 체제 위협, 정치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 등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sup>32)</sup> 즉 자신들의 생존을 어렵게 하는 모든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인식이 기저에 깔려있다. 따라서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미국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자위력을 갖춘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수단이 핵무기임을 강조하는 한편 핵무력 고도화의 필수인 핵של전무기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이 인식하는 최고의 적대시 전쟁 연습 사례로써 자신들의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한 훈련으로 판단하고 있다.<sup>33)</sup> 결국 이와 같은 군사적 행동들이 자신들의 체제와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적대시 정책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 (2) 미사일 개발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이중 기준’ 비난

북한은 미사일 개발과 관련하여 국제사회 및 한·미가 자신들에게만 ‘이중잣대’를 적용한다고 비난하며,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밝히고 있는 ‘이중 기준’은 자위적 국방력 강화 차원에서 시행한 미사일 발사시범을 미국과 국제사회가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 ‘무력도발’ 등으로 간주하는 태도이다.

북한의 ‘이중 기준’ 철회와 관련해 주목할 점은, 첫째, 북한은 이중 기준 철회

32) 홍석훈, “문재인 정부의 평화·통일정책: 북핵 문제와 미·중관계를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제19권 1호, 2018, p. 57.

33) 북한 외무성은 홈페이지 발표를 통해, “세상이 다 아는 바와 같이 조선반도(한반도) 정세가 긴장 격화의 소용돌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연간에만도 미국은 저들이 직접 중지를 공약했던 합동군사연습을 수백 차례나 벌이고 첨단 군사 공격 수단들과 핵전략 무기들을 남조선과 조선반도 주변 지역에 끌어들이면서 우리 국가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했다”고 비난했다.

회를 북미 간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는 점이다. 하노이 북미정상 회담 결렬 이후 북미 관계가 냉각기에 접어들며 관망 자세를 유지하고 있던 2021년 3월, 새롭게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화 제의를 했으나, 북한은 “대화 분위기가 먼저 조성되어야 함”을 언급하며, 대화 재개 조건으로 이중 기준 철회를 주장했다.<sup>34)</sup> 즉 미국의 외교적 관여와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대해 강한 불신을 나타내며, 이중 기준 적용 또한 적대시 정책의 하나로 판단한 것이다. 둘째, 핵 및 미사일 개발을 미국의 체제 위협으로 벗어나기 위한 자위적 국방력 강화 조치임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 개발에 있어 중시하는 부분 중 하나가 ‘명분과 정당성’ 확보이다. 미사일 개발 명분을 이중 기준 적용을 통해서 찾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셋째,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 관철을 위한 이미 계획된 일정임을 주장하고 있다.<sup>35)</sup> 북한은 일반적인 국가방위력 강화 차원의 증점과제수행이라고 강조했으며, 이는 아래의 공식 담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3월 북한의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 이후 나온 리병철 당 중앙위원회 비서의 담화에 따르면, “우리 당과 정부가 국가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시한 국방과학정책목표들을 관철해나가는데서 거친 하나의 공정으로서 주권 국가의 당연한 자위권에 속하는 행동이다.”라며 미사일 시험발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sup>36)</sup> 또 2021년 9월 15일, 같은 날 진행된 북한의 열차미사일기동연대 훈련과 한국의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시험을 비교하며 미국의 이중 기준 적용을 비난했다.<sup>37)</sup> 그러면서 북·미 간 냉각 국면이 장기화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이중잣대’ 적용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은 “자기들의

34)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담화.” 『조선중앙통신』 2021년 3월 18일.

35) 박형준,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이후 북한의 대미 담화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27집 제1호, 2022, p. 109.

36) “리병철 당 중앙위원회 비서의 담화.” 『조선중앙통신』 2021년 3월 27일.

37) 북한의 한 평론가는 “미국은 15일 공교롭게도 동일동시에 조선반도에서 울린 폭음을 들으면서도 ‘북조선의 행동은 미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길고 들었고 남조선의 행동에 대해서는 함구무언 하였다”라고 짚었다. 북한 외무성 홈페이지(2022년 2월 2일).

류사행동은 평화를 뒤받침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고 우리의 행동은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으로 묘사하는 비논리적이고 관습적인 우매한 태도에 커다란 유감을 표하며 장차 북남관계발전을 놓고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고 밝히며 국제사회의 불합리성을 주장하기도 했다.<sup>38)</sup> 한편 김정은도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지금 미국은 우리의 핵과 자위력강화가 세계평화와 지역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으로 된다는 얼토당토않은 궤변”이라며 이중 기준 적용에 대해 비난을 이어갔다.<sup>39)</sup> 이처럼 북한은 이중 기준 적용을 비난하며, 이러한 상황들이 “조미관계를 더이상 되돌리기 힘든 한계점으로, 격돌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를 종합하면, 북한은 자신들을 적대시하고, 자신들의 미사일 시험발사만을 문제 삼는 정세 인식 때문에 자위적 국방력 강화만이 자신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이중 기준’ 적용을 한반도 문제 해결의 기본 장애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중 기준 적용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는 한편 미국과 한국, 서방 국가들의 같은 행동에 대해서는 자위적 차원으로 간주하는 것을 비난한다.

이처럼 자위적 국방력 강화의 정당성과 명분을 찾기 위한 ‘적대시 정책’과 ‘이중 기준’을 활용하는 북한의 군사전략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김정은은 시정연설에서 “적들의 책동으로 긴장격화된 정세는 오히려 우리에게 군사력을 더 빨리 비약시킬수 있는 훌륭한 조건과 환경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자위력강화의 정당성과 그 우선적강화의 불가피한 명분을 제공해주는것으로 되었다”며 무기 개발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리고 이를 “공화국의 국방성과 국방공업은 조성된 국면을 군력강화의 더없는 좋은 기회로 삼을것이다.”라고 밝히며 장기화하고 있는 대화 중단 국면을 활용해 국방력 강화를 지속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38)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참관 당시 언급한 “우리의 미사일 전력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에 충분하다”는 발언에 대한 비난이었다.

39) “조국해방전쟁참전자들은 우리 공화국의 가장 영웅적인 세대이다.” 『조선중앙통신』 2022년 7월 28일.

## 2. 전술핵무기의 다양화를 통한 핵무력 강화 시도

북한은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을 통해 전술핵무기의 다양화와 한반도 군사력의 균형을 시도하고 있다. 즉 타격 대상과 목표에 맞는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개발함으로써 한국, 일본, 인근 미군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핵 억제력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이다.<sup>40)</sup> 북한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 이미 제8차 당대회에서부터 국방력 강화 계획을 발표했으며, 계획의 이행 차원에서 올해 초부터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유도 기능이 있는 초대형 방사포, 극 초음속 미사일 등을 시험 발사한 북한은 최근 레이더 포착이 쉽지 않은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횟수도 늘리고 있다.<sup>41)</sup> 이처럼 ‘전술핵 운용의 확장과 적용 수단의 다양화’를 강조하며 무기체계를 더욱 고도화시키는 군사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올해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7차례 실시한 탄도미사일 발사가 전술핵 운용을 위한 군사훈련이었다고 발표하며 실전 배치 위협까지 가하고 있다.<sup>42)</sup> 9월 25일에는 “전술핵탄두 반출 및 운반, 작전 시 신속하고 안전한 운용취급질서 확정, 전반적 운용체계의 믿음성 검증 및 숙달, 저수지 수중 발사장에서의 발사능력 숙력 및 신속 반응태세 검열”했으며, 이어 28일에는 “남한내 작전지대 안의 비행장 무력화 목적”이 있었음을 밝혔다. 그리고 “해당 설정표적들의 상공 폭발과 직접 정밀 및 산포탄 타격”(9월 29일, 10월 1일), “태평양상의 설정된 목표수역을 타격”(10월 4일), “적의 주요 군사지휘시설 타격 모의”(10월 6일), “적의 주요 항구 타격 모의”(10월 9일) 등의 훈련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동시에 전술핵 실전 활용까지 시사하

40) 김동엽,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군사 분야 변화와 전망”, p. 93.

41) “북한 '핵무력 정책' 법제화의 국제정치적 함의.” 『통일뉴스』 2022년 9월 14일,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151>(검색일: 2022.9.14.).

42) “전술핵 운용부대의 다양한 발사 훈련을 통해 목적하는 시간, 목적하는 장소에서, 목적하는 대상을 목적하는 만큼 타격해 소멸할 수 있게 완전한 준비태세에 있는 우리 국가 핵 전투 무력의 현실성과 전투적 효과성, 실전능력이 남김없이 발휘됐다”고 주장했다. “나라의 전쟁억제력과 핵 반격능력을 검증 판정하며 적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조선인민군 전술핵 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이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기간에 진행되었다.” 『로동신문』 2022년 10월 10일.

며 대남·대미 위협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그러면서 무력 시위와 군사 도발의 원인으로 한·미를 지목하면서 정당성을 강변했다.<sup>43)</sup> 북한의 이러한 행태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반발과 윤석열 정부의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대한 대응력 과시로 볼 수 있다.<sup>44)</sup>

〈표 3〉 2022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일지

시기	지역	미사일 종류 (비행거리, 정점고도)	비고
1월 5일	자강도 일대	중중거리탄도미사일(MRBM)급 '극초음속미사일 1발' (700km 미만, 50km 이하)	북한 "700km 비행 및 120km 측면가동" 주장
1월 11일	자강도 일대	MRBM급 '극초음속미사일 1발' (700km 이상, 약 60km)	북한 "1000km 비행 및 240km 선화기 동" 주장
1월 14일	평안북도 의주 일대	단거리탄도미사일 KN-23(일명 '북한판 이스칸데르') 2발 (약 430km, 정점고도 약 36km)	평북 철도가동미사일연대 검열 시격훈 련
1월 17일	평양 순안공항 일대	단거리탄도미사일 KN-24(일명 '북한판 에이태컴스(ATACMS)') 2발 (약 380km, 약 42km)	전술유도탄 검수사격시험
1월 25일	내륙	장거리 순항미사일 2발	북한 "2시간 32분 17초 간 1800km 비 행" 주장
1월 27일	함경남도 함흥 일대	자대지 전술유도탄(단거리탄도미사일 KN-23) 2발 (약 190km, 약 20km)	북한 "상용 전투부 위력 확증" 주장
1월 30일	자강도 무평리 일대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1발 검수사격시험 (약 800km, 약 2000km)	-
2월 27일	평양 순안공항 일대	ICBM '화성-17형' 개발용 탄도미사일 1발 (약 300km, 약 620km)	북한 "정찰위성 개발시험" 주장
3월 5일	평양 순안공항 일대	ICBM '화성-17형' 개발용 탄도미사일 1발 (약 270km, 약 560km)	북한 "정찰위성 개발시험" 주장
3월 16일	평양 순안공항 일대	ICBM '화성-17형' 개발용 탄도미사일 1발 발사 실패	고도 20km 미만 상공서 폭발

43) 김일기, "최근 북한의 무력 시위와 우리의 대응 방향." 『이슈브리프』 제397호, 2022, p. 1.

44) 고재홍, "북한의 최근 대남도발의 특징과 전망." 『이슈브리프』 제396호, 2022, p. 2.

3월 20일	평안남도 속천 일대	방사포(다연장로켓포) 4발 발사	-
3월 24일	평양 순안공항 일대	ICBM '화성-15형' 1발 (약 1,080km, 6,200km 이상)	북한 “‘화성-17형’ 시험발사 성공” 주 장
4월 16일	함경남도 함흥 일대	전술탄도미사일 (신형전술유도무기) 2발 (약 110km, 약 25km)	-
5월 4일	평양 순안공항 일대	ICBM 추정 탄도미사일 1발	-
5월 7일	함경남도 신포	SLBM 추정 탄도미사일 1발 (600km 미만, 60km)	-
5월 12일	평양 순안공항 일대	'초대형방사포(KN-25) 추정 단거리탄도미사일 3발 (약 360km, 약 90km)	-
5월 25일	평양 순안공항 일대	ICBM 추정 탄도미사일 1발 (약 360km, 정점고도 540km) 및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 (760km, 약 60km)	다른 1발은 발사 후 고도 약 20km에서 소실
6월 5일	평양 순안 평안남도 개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함경남도 함흥 일대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씩 총 8발 (약 110~670km, 약 25~90km)	-
6월 12일	북한 서해안 일대	서해상으로 방사포 5발	-
7월 10일	북한 서해안 일대	서해상으로 방사포 2발	-
7월 11일	북한 서해안 일대	서해상으로 방사포 1발	-
8월 17일	평안남도 온천비행장 일대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추정) 2발	북한 “평안남도 안주시 금성다리서 발 사” 주장
9월 25일	평안북도 태천 일대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1발 (600여km, 60여km)	
9월 25일~ 10월 9일	북한 전역	'전술핵운용부대' 훈련	-

출처: “[일지]北 해상 완충구역 포격 도발… ICBM 발사 후 17일 만.” 『뉴스1』 2022년 10월 9일, <https://www.news1.kr/articles/4823974>(검색일:2022.10.15.). 보도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최대한 고도화하는 한편 이를 대남 군사 위협을 높이는데 우선 활용함으로써 남한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전략적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도 배제 할수 없다.<sup>45)</sup> 또 미국의 핵우산 내에 있는 남한과의 군사력을 비슷한 수준까지 끌어올려 한반도 군사력의 균형을 시도하려는 국방력 강화 정책의 하나이다. 즉 전술핵무기의 다양화를 통해 공격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극복하여 미국의 보복을 피할 수 있는 국방력 강화를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sup>46)</sup>

### 3. ‘핵무력정책’ 공표와 핵 불(不) 포기

김정일이 직접 언급한 아래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북한은 현 정세 인식을 바탕으로 ‘핵무력정책’을 법제화했고 한국과 미국의 선 비핵화 요구를 거부했다. 즉 ‘비핵화 불가’ 및 ‘핵무기 고도화의 불가역성’을 천명한 것이다.<sup>47)</sup> 그 이유에 대해 여전히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활발하게 전개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은 핵을 포기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한미확장억제력’과 ‘한국형 3축 체계’를 경계하며,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돌리고 있다.<sup>48)</sup>

“지금 겪고있는 곤란을 잠시라도 면해보자고, 에돌아가자고 나라의 생존권과 국가와 인민의 미래의 안전이 달린 자위권을 포기할 우리가 아니며 (중략) 미국을 전망적으로 견제해야 할 우리로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수 없습니다.”

45) 고재홍, 위의 논문, p. 1.

46) Hwang, H. P., “North Korea’s Evolving Nuclear Posture: Strategic Implications of Pyongyang’s Tactical Nuclear Weapons Development,” *The Quarterly Journal of Defense Policy Studies*, Vol. 37, No. 3, 2021, pp. 7~43.; 문성준, “역제이론을 중심으로 저위력 핵무기 개발 및 함의에 관한 연구,” p. 123.

47) 홍민·홍재환, “최고인민회의의 김정은 시정연설 분석,” p. 5.

4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시정연설.” 『로동신문』 2022년 9월 9일.

“우리 나라의 지정학적특성과 전략적지위로 보나, 우리 혁명앞에 조성된 현정세로 보나 제국주의침략무력에 비한 우리 국가의 확고한 군사적우세는 필수불가결의 요구로 나섭니다.”

“남조선 현 《정권》도 저들 군대의 군사적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우리를 억제한다는 강도적인 논리를 주장하며 《한미확장억제력》의 실행력을 높여 《한》 미련합방위태세를 강화한다느니, 이른바 《한국형 3축타격체계》를 구축하여 《억제력》과 《대응력》을 높인다는니 떠들면서 지역의 군사적긴장을 더 야기시키는 위험한 군사행동과 군비현대화놀음을 본격화하고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 밝힌 전술핵 운용부대의 미사일 발사훈련은 미 항공모함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 해상연합훈련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라고 정당화했다. 김정은은 “미국과 남조선정권의 이러한 지속적이고 의도적이며 무책임한 정세격화 행동은 부득불 우리의 더 큰 반응을 유발시키게 될뿐”이라고 강조했다.<sup>49)</sup> 북한은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을 비난하며, 자신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핵을 더욱 포기할 수 없다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군사전략이 기존의 방어적 입장에서 핵무기의 선제적 사용이 가능한 공세적 입장으로 전환한 것은, 지난 9월 8일 ‘핵무력정책’의 법제화와 관련이 있다.<sup>50)</sup> 북한은 법제화 배경에 대해 “미국의 목적이 북한 핵 자체를 제거해 버리자는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핵을 내려놓게 하고 자위권 행사력까지 포기 또는 열세하게 만들어 정권을 붕괴시키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

49) 『조선중앙통신』 2022년 10월 10일; “한미 훈련 명분으로 ‘핵 고도화’...전술핵 실전 위협 현실화한 북한.” 『경향신문』 2022년 10월 10일.

<https://www.khan.co.kr/politics/defense-diplomacy/article/202210101820001>(검색일:2022.10.31.).

50) 핵무력 정책은 1조부터 11조까지 핵무력의 사명, 핵무력의 구성,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핵무기 사용 결정의 집행, 핵무기의 사용 원칙, 핵무기의 사용 조건, 핵무력의 정상적인 동원태세, 핵무기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와 갱신, 전파방지, 기타 등으로 구성됐다.

했다.<sup>51)</sup> 이는 현재 북한이 미국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정세를 판단을 하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핵무력을 어떤 경우에,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구체적 계획을 규정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하고 있으며, 공격적으로 소형화한 전술핵의 사용 범주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sup>52)</sup> 이와 함께 북·미냉각 국면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대미·대남 압박용 카드로 ‘실전 공격용’ 문구를 포함하며 더욱 강경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북한은 국방력 강화를 통해 삼각 억제구조를 활용할 수 있는 핵심기반을 조성하여 미국의 대북 군사적 행동을 억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핵무기 포기와 관련한 협상은 더 이상 없다고 명확히 밝히면서도, 점진적으로 비핵화 협상의 문턱을 높여나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과거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체제 안전과 보장을 위해 ‘적대시 정책’ 폐기를 주장했지만, 미국의 합의 불이행으로 불신이 가중되었다. 그리고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냉각국면이 장기화하자 대북 제재로 인한 북한의 피로감이 더욱 가중되면서 북한은 점차 비핵화 협상 문턱을 높여나갔던 것이다. 이어 중단된 대화의 재개 조건으로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 폐기와 ‘이중 기준’ 적용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마저도 미국이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에서 보수 정권의 출범을 계기로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시 정책을 활용해 대북 압박을 가속화 하자,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변함이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중국에는 정권을 붕괴시키려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북한은 이와 같은 정세 판단하에 핵무력을 기반으로 한 군사전략 변화에 있어 한층 강화되고 업그레이드된 조치를 들고나온 것이다. 즉 ‘적대시 정책’ 폐기

5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조선중앙통신』 2022년 9월 9일.

52) 이성훈, “북한 핵무력 법제화의 함의: 핵교리의 공세성 강화와 대비방향.” 『이슈브리프』 제389호, 2022, p. 4.

와 ‘이중 기준’ 철회를 한반도 정세변화의 전제 조건으로 설정하는 한편,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거나, 비핵화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천명했다. 그리고 핵무력정책의 법령 공포를 통해 ‘적대세력의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사시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라고 명시함으로써 핵무기의 선제적 사용을 시사한 것이다. 이는 고강도 대미 선전 포고로 볼 수 있다.

#### IV. 결론

북한이 지난 9월 8일 발표한 ‘핵무력정책’ 법령은 김정은 집권 이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온 핵 교리를 법제화하여 핵 보유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전술핵 운용을 위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통해 대미 핵 억제력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한편 국방력 강화에 그 목적이 있다. 즉 북한의 핵 태세가 대미 확증 보복(전쟁 억제)에 그치지 않고 전술핵의 실전 사용을 불사하는 비대칭 확전(작전적 사명)으로 이동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sup>53)</sup> 특히 북한이 밝힌 타격 대상이 한국 내 주요 시설과 일본, 미군 기지임을 직접 언급함으로써 한반도의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인식하는 대외정세는, 미국과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오히려 한미연합훈련 등을 거론하며 그 강도가 높아졌다고 본다. 이와 같은 정세 판단하에 자신들의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들로부터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자위적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그 명분과 정당성을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이중 기준’ 적용에서 찾고 있다. 이를 근거로 전술핵무기의 다양화를 통해 한반도에서 군사력 균형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다양한 전술핵무기의 개발을 통한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는 길 만이 핵 억제 효과를

53) 김정섭, “핵 독트린 관점에서 본 북한의 핵 무력 법령.” 『정세와 정책』 통권 355호, 2022, p. 2.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비례하여 체제 위기 상황이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선제적으로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하며 ‘강 대 강’의 대치 국면으로 나갈 것이다.

한편 삼각 억제구조 측면에서 북한은 미국의 체제 전복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과 일본에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sup>54)</sup> 즉 북한은 미국을 억제하기 위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등 역내 국가들을 대상으로 핵 타격 범위에 놓는 삼각 억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수립에도 상당한 난관이 예상되며, 남북관계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은 과거 자신들의 핵 능력을 더욱 고도화시킨 후 대화 테이블에 나오는 전략을 취해 왔고 앞으로도 같은 패턴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전술핵 실전 활용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한국 정부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응할 수 있는 ‘3축 체계(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와 미국의 확장억제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북한이 협상 국면에 돌입할 때를 대비한 협상 전략의 구상 또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분명한 점은 한반도 평화 모색의 기회가 많지 않다는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철저히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발표 내용을 해석적 차원으로만 접근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이다. 향후 통계적 수치의 활용을 통해 좀 더 실증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54) Sohn, H. B., “The ROK-US Alliance in the Post-Cold War Era: Alliance Management for strengthening its Extended Deterrence.” *The Studies of New Security Challenges*, No. 187, 2015, pp. 41~72.; 문성준, “억제이론을 중심으로 저위력 핵무기 개발 및 함의에 관한 연구.”, p. 124.

## 참고문헌

- 고재홍, “북한의 대외 강경행보 배경과 파급영향.” 『이슈브리프』 제404호, 2022.
- \_\_\_\_\_, “북한의 최근 대남도발의 특징과 전망.” 『이슈브리프』 제396호, 2022.
- \_\_\_\_\_, “북한의 핵군사 전략.” 『북한』 통권 420호, 2006.
- 김동엽,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군사 분야 변화와 전망.” 『경제와 사회』 통권 제122호, 2019.
- \_\_\_\_\_, “경제·핵무력 병진노선과 북한의 군사 분야 변화.” 『현대북한연구』 18권 2호, 2015.
- 김일기, “최근 북한의 무력 시위와 우리의 대응 방향.” 『이슈브리프』 제397호, 2022.
- 김정섭, “핵 독트린 관점에서 본 북한의 핵 무력 법령.” 『정세와 정책』 통권 355호, 2022.
- 김태환, “북한군 군사전략 변화에 대한 연구: ‘전략불균형’에 대한 ‘위협관리’를 중심으로.” 『전략연구』 통권 제66호, 2015.
- 김현기, “억제전략의 이론 연구.” 『전략논단』 통권 제5호, 2006.
- 문성준, “억제이론을 중심으로 저위력 핵무기 개발 및 함의에 관한 연구.” 『신진국방연구』 제4권 제3호, 2021.
- 박재영, 『국제정치 패러다임』, 서울: 법문사, 2004.
- 박용환, “북한 군사전략에 관한 연구.” 『북한학연구』 제6권 제1호, 2010.
- \_\_\_\_\_, “북한의 군사전략 노선과 목표.” 『북한』 통권 575호, 2019.
- 박형준,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이후 북한의 대미 담화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27집 제1호, 2022.
- \_\_\_\_\_, “북한의 대미 담화 연구: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이후를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제21권 4호, 2020.
- 박현욱, “[군사 : 비대칭 군사전력 강화로 정치협상 추구] 변하지 않는 북한의 군사우선 정책과 비대칭 전력을 이용한 정치협상 추구.” 『북한』 통권 432호, 2007.
- 박휘락, “핵억제이론에 입각한 한국의 대북억제태세 평가와 핵억제전략 모색.” 『국제정치논총』 제53집 3호, 2013.
- \_\_\_\_\_, “북한의 선군정치와 군사전략.” 『북한』 통권 325호, 2001.

- 서보혁, 『탈냉전기 북미관계사』, 서울: 선인, 2004.
- 신동훈, “핵억지 이론을 통해 살펴 본 북한의 핵전략.” 『韓國軍事學論叢』 제74집 제1권, 2018.
- 이상택, “북한 군사전략의 역사적 고찰.” 『軍史』 제112호, 2019.
- 이성봉, “1960년대 북한의 국방력 강화 노선과 정치체제의 변화.” 『國際政治論叢』 제44집 제2호, 2004.
- 이성훈, “북한 핵무력 법제화의 함의: 핵교리의 공세성 강화와 대비방향.” 『이슈브리프』 제389호, 2022.
- 이홍석, “역사적 맥락을 적용한 군사전략과 군사력 건설에 관한 연구.” 『軍史研究』 제149집, 2020.
- 온창일, 『전략론』, 서울: 지문당, 2004.
- 하상섭, “국제사회 극제체 변화 속 북한 국방력 강화가 북한 안보-경제 메커니즘에 미치는 영향.” 『한국시스템다이나믹스연구』 제23권 제2호, 2022.
- 홍민·홍제환, “최고인민회의의 김정은 시정연설 분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2-26, 2022.
- 홍민, “북미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원인과 북한의 전략.”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9-22, 2019.
- 홍석훈, “문재인 정부의 평화·통일정책: 북핵 문제와 미·중관계를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제19권 1호, 2018.
- Freedman, Lawrence, *Deterrence*, Cambridge: Polity Press, 2004.
- Harkavy, Robert E., “Triangular or indirect deterrence/compellence: Something new in deterrence theory?.” *Comparative Strategy*, Vol. 17, No. 1, 1988.
- Hwang, H. P., “North Korea’s Evolving Nuclear Posture: Strategic Implications of Pyongyang’s Tactical Nuclear Weapons Development.” *The Quarterly Journal of Defense Policy Studies*, Vol. 37, No. 3, 2021.
- Keohane, Robert O,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 Lebow, Richard Ned, *Coercion, Cooperation and Ethics in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Routledge, 2007.
- Lindblom, Charles, *The Intelligence of Democracy*, New York: Free Press, 1965.

- Sohn, H., B., "The ROK-US Alliance in the Post-Cold War Era: Alliance Management for strengthening its Extended Deterrence." *The studies of New Security Challenges*, No. 187, 2015.
- Roehrig, Terence, *From Deterrence to Engagement: The U.S. Defense Commitment to South Korea*, Lanham: Lexington Books, 2006.
- “나라의 전쟁억제력과 핵 반격능력을 검증 판정하며 적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조선인민군 전술핵 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이 9월 25일부터 10월 9일 까지 기간에 진행되었다.” 『로동신문』 2022년 10월 10일.
- “리병철 당 중앙위원회 비서의 답화.” 『조선중앙통신』 2021년 3월 27일.
- “북한 '핵무력 정책' 법제화의 국제정치적 함의.” 『통일뉴스』 2022년 9월 14일,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151>(검색일: 2022.9.14.).
-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을 새 승리로 인도하는 위대한 투쟁강령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보고에 대하여. 3.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대외관계발전을 위하여.” 『로동신문』 2021년 1월 9일.
-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발전과 우리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22년 1월 1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선희 외무성제1부상 답화.” 『조선중앙통신』 2021년 3월 16일.
- “조국해방전쟁참전자들은 우리 공화국의 가장 영웅적인 세대이다.” 『조선중앙통신』 2022년 7월 28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조선중앙통신』 2022년 9월 9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시정연설.” 『로동신문』 2022년 9월 9일.
- “주체혁명위업승리의 활로를 밝힌 불멸의 대강-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가자.” 『조선중앙통신』 2020년 1월 1일.
- “한·미 훈련 명분으로 '핵 고도화'...전술핵 실전 위협 현실화한 북한.” 『경향신문』 2022년 10월 10일 <https://www.khan.co.kr/politics/defense-diplomacy/article/202210101820001> (검색일:2022.10.31.).

“北유엔대사 "美, 핵우산 제공 자제하라"…연합훈련 중단 요구.” 『연합뉴스』 2022년 10월 12일, <https://www.yna.co.kr/view/AKR20221012041900072?input=1195m>(검색일:2022.10.28.).

“[일지]北 해상 완충구역 포격 도발… ICBM 발사 후 17일 만.” 『뉴스1』 2022년 10월 9일, <https://www.news1.kr/articles/4823974>(검색일:2022.10.15.).

북한 외무성 홈페이지.

Abstract

## A Study on North Korea's Perception of Foreign Situation and Reinforcement of National Defense Power

Hyong Joon Park(Assistant Professor, Liberal arts college,  
Glocal Campus, Konkuk Univ.)

Seong Yong Park(Assistant Professor, Dept. of Political Science & Diplomacy,  
Jeonbuk Nat'l Univ.)

As North Korea's recent offensive missile provocations have developed into military exercises of tactical nuclear units to show off the diversity of missile launch capabilities, rather than simple development, they pose a serious threat to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e current situation perceived by the North Korean leadership is that despite the preemptive measures for denuclearization, nothing has been gained from the United States over the past three years, and it has only been used. In particular, in a situation where there is no fundamental change in hostile policy, it is rather perceived as a crisis situation in which the threat to the regime against them is further heightened. Considering these points, how does the situational variable of North Korea's crisis affect the strengthening of national defense, represented by the strengthening of nuclear force?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reinforcement? etc., need to be consider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military strengthening through consideration of North Korea's perception of the foreign situation. In other words, how North Korea perceives the situation and how it views the United States after the collapse of the North Korea-US summit in Hanoi? And, as a result, it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and changes in strengthening North Korea's defense capability represented by nuclear force.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military and security countermeasures and implications for alleviating the crisis situation in a situation where the stalemate is prolonged.

Keywords: North Korea, Foreign Situation, Perception toward U.S., National Defense, Nuclear Force

투고일: 2022년 11월 04일, 심사일: 2022년 11월 28일, 게재확정일: 2022년 12월 20일